



프랑스 파리 샹젤리제 거리의 가로수들이 화려한 크리스마스 네온으로 장식됐다. 프랑스인들은 경기 불황으로 전보다 우울한 크리스마스를 맞고 있다. /파리=정상필기자 camus@

샹젤리제 거리 네온 뒤엔 파리의 우울한 크리스마스

파리=정상필 특파원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낭만으로 가득했던 프랑스의 크리스마스 풍경마저 바꾸고 있다.

크리스마스 때면 발디딜 틈이 없던 백화점이나 거리의 상점들이 때 아닌 '세일' 간판을 내붙이는가 하면, 금전에 대해서는 극히 말을 삼가는 프랑스인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현찰'을 원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경기 불황에 활기 잃어

프랑스인들에게 크리스마스는 우리로 치면 설이나 추석 쯤 된다. 크리스마스 일요일을 전후로 전국의 초·중·고교는 물론 대학교까지 2주간의 방학에 들어간다. 직장인들도 휴가를 내 가족과 친지들을 찾는다.

거리에는 크리스마스를 알리는 화려한 네온들이 12월 초부터 하나둘 켜지기 시작하고, 크리스마스에 만나게 될 가족·친지들의 선물을 사기 위한 사람들의 발걸음도 빨라진다. 그러나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올해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 라디오 방송채널 프랑스 블루(France Bleu)와 여론조사 업체 Ipsos가 지난달 15세 이상 프랑스인 1천 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는 올해 연말에

백화점·상가마다 '세일'

지출을 예년에 비해 줄이겠다고 답했다. 또 응답자의 절반에 달하는 48%는 크리스마스 선물과 함께 약간의 '돈'을 받고 싶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지난해 39%에 비해 10% 포인트 가량 늘어난 것으로 경기 불황의 뚜렷한 현상으로 분석되고 있다.

프랑스의 우울한 크리스마스는 거리에서도 느껴진다.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후 여름과 겨울 1년에 두 차례만 가능했던 할인판매에 대한 규제가 완화되면서 상인들이 저마다 '세일' 문구를 내건 것이다. 다른 여론조사 기관 Ifop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61%의 상인들이 가격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들의 닫힌 주머니를 열기 위한

교육지책이다. 연말이 가까워지면서 중고시장이 활기를 띠고 있는 것은 프랑스의 새로운 크리스마스 풍속이다. 엠마뉴엘 재단의 노엘 베품시장은 예년에 비해 10% 이상 많은 사람들이 물려 성황을 이루고 있다. 인터넷 중고시장도 예외는 아니다. 이베이(eBay) 프랑스가 사이트 이용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는 지난해보다 20% 포

가장 원하는 선물 '현금'

인트 늘어난 41%의 응답자들이 크리스마스 때 받은 선물을 되팔겠다고 밝혔다. 이유는 '돈이 필요해서'다.

가난한 사람은 마음이 부자라는 말처럼, 역설적이게도 불황이 오면서 웃는 곳은 따로 있다. 성당에 이전보다 많은 사람이 찾고 있고, 프랑스인들의 기부도 불황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 인터넷 사이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93%의 프랑스인들은 이번 크리스마스 때 물질적인 선물보다 가족에 더 위안을 받는다고 밝혔다. /camus@kwangju.co.kr

돌아 본 2009

3 싸움질 하다 끝난 국회

독주-농성...정치는 없었다

2009년 국회에는 '정치'가 없었다. 대신 '점거 농성' '단독 처리' '직권 상정'이 여의도 정가의 수식어가 됐다.

여당은 다수의석의 힘만 믿고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다. 야당은 여당의 일방통행에 맞서 몸으로 싸웠다. 당연히 국회에서는 물리적 충돌이 비일비재했다. 이를 중재하고 조정할 의지도, 인물도 없었다. 청와대는 야당을 설득하지는 않고 무시로 일관했으며 청와대·여당·야당의 정무라인은 전혀 가동되지 않았다. 정치 실종의 한해를 보낸 것이다.

올 해해 국회는 점거농성으로 시작했다. 지난해 12월18일 한나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임위에 단독 상정하자 민주당은 국회의장실을 점거했으며 이어 26일부터는 국회 본회의장과 행안위·정무위 등 2개 상임위원회실을 점거하며 장기 농성에 들어갔다.

FTA·미디어법·4대강·세종시...

여야 현안마다 충돌 1년 내내 대치

쟁점은 미디어법과 한미 FTA 비준동의안 처리 문제였다. 민주당은 올 1월1일 국회의장실, 6일엔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실의 농성을 모두 풀었다. 물론 여야의 협상 결과였다. 가장 큰 쟁점이었던 미디어 관련 6개 쟁점 법안을 합의처리하고 한미 FTA 비준안은 미국 오바마 대통령 당선자의 취임 이후 이른 시일 내에 협의처리하기로 했다.

이 같은 협상의 결과는 7월에 또 다시 여야 충돌로 이어졌다. 한나라당과 민주당은 15일 낮 본회의 산회 직후 상대 당의 의장석 점거를 저지하기 위한 농성전에 돌입했다. 여야가 동시에 본회의장을 검거하는 희극이 연출된 것. 결국, 22일 여

야의 난투극 속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김경오 의장 대신 미디어 관련 3법을 통과 시킴으로써 여야의 대치는 끝났으나 이후 재투표 및 대리투표 논란 등으로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는 불행사나운 모습도 보여졌다. 이를 계기로 야당은 국회 담장 밖으로 뛰쳐나갔고 반쪽짜리 국회에서 160여석의 집권여당은 하릴없이 시간만 때웠다. 민주당은 8월 국정감사 준비기간을 모두 장외에서 소진했다.

이후 가까스로 9월 정기국회의 사일정에 합의했지만 여야 대치는 계속됐다. 여권이 4대강 문제에다 세종시 수정안까지 들고 나와 불을 지른 것. 때문에 정기국회 100일은

세종시·4대강 문제에 막혀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교육과학기술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최근까지 지난해 18대 국회 개원한 이래 1년 반 동안 제출된 700여건의 계류 법안 중 단 한 건도 처리하지 못하는 기록을 세웠으며 환노위는 개원 480일째인 이달 11일야야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 과정에서 수많은 민생법안과 지역현안 법안은 쌓여 갔고 내년도 예산안 처리도 법정처리기한(12월 2일)을 넘긴 지 오래다.

이 같은 여야 대치의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일방통행과 이 사이에서 국민보다는 청와대만 바라보는 여당이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정치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야당도 수적 열세를 국민과 함께하는 모습에서 극복하지 못하고 강경투쟁으로 일관, 정치 실종에 한몫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 최초 도심형 다운하우스 첨단 비버리힐즈

2단지 20필지 분양개시

※ 필지 최소분할 면적은 150평 이상(분할 160평)

Sample House

파/격/분/양

1. 전용 30~35평분할 20개필지까지 지원

2. 한·국·기종거주 한미프대대 단입 가능

※ 분양권 보유분은 사전에 계약해제 후 분양

시행사: 그린빌(주)

시공사: JAC

분/양/문의: 062)375-7000

문의/예약: 062)974-5555

李대통령 “지역 토착세력이 비리 온상”

부정부패·권력형 비리 척결 고강도 대책 주문

이명박 대통령이 23일 법무부, 법제처, 국민권익위원회의 내년도 업무보고에서 지역 토착세력의 비리에 대해 강도높은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지난 8·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선언한 데 이어 사이비언론 등 지역 토착세력의 구조적 비리 가능성을 다시한번 강조하며 척결 대책을 주문한 것.

이날 토론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문제가 됐던 일부 기초자치단체의 예산 전용과 횡령 사례를 구체적인 숫자를 제시하며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총산) 흥성군만 해도 670명 가운데 108명이 집단으로 예산을 빼돌리는 데 가담했다. 어떤 직원은 4천496만원을 빼돌려서 유혹비로 쓰고, 어떤 직원은 3천941만원

을 빼돌려 1천700만원을 고급 유흥주점에서 썼다고 한다”면서 “생계형 범죄가 아니다”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볼 때는 우리 지역도 그렇지 않을까 의구심이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은 “기초 지자체를 보면 지난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216명 가운데 10%가 당선무효로 중간에 물러났고, 올해 공기업에 근무하는 임직원 51명이 구속됐다”면서 “이런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토착 세력과 사이비언론이 결부돼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예산을 어렵게 책정해도 일선 공무원들이 예산을 빼돌리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고 지역에서는 이른바 ‘연꽃’이 작용해 단속도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을 들며 근본적인 대책을 지시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합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오는 2012년까지 전국 고검 및 주요 지검에 전문수사팀을 만들어 토착 세력의 이권 개입과 공무원 비리를 철저히 수사하는 한편 기업의 대규모 비자금 조성이나 비자금 유출 행위를 근절기로 했다.

토론에 참석한 민간 참석자들도 지역 토착세력의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단속과 처벌을 촉구했다. 이호원 서울대 교수는 “고위공직자나 지역토착세력 등 구조적, 고질적 부패 범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면서 “특히 예산 및 방위사업 관련 비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요망된다”고 지적했다.

이창재 대검 수사기획관은 “지역 공직비리를 척결하기 위해서는 관용 없는 엄정한 처리로 토착세력과 부패 공무원, 사이비언론과의 연계 등 뿌리깊은 부패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스

비상구 폐쇄 신고포상금제 광주시소방본부 내년 4월부터

이르면 내년 4월 광주에서 ‘비상구 폐쇄 불법행위 신고포상제’가 시행된다.

23일 광주시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본부는 화재 때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비상구 등 피난·방화시설을 불법으로 폐쇄하는 행위 근절을 위해 내년부터 비상구 폐쇄 불

법행위 신고포상제를 도입한다. 소방안전본부는 포상금으로 현금 5만원이나, 소화기 등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소방안전본부는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센터 설치, 포상금 지급 범위 등 구체적인 조례안을 마련해 내년 1월께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기

간을 가질 예정이다. 소방안전본부 관계자는 “행정 당국이 광주 시내 건물, 시설에 대한 상시 소방점검에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들을 대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며 “내년 초부터 시범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